

# KDI FOCUS

## KDI FOCUS

2012년 4월 23일(통권 제15호)

자료문의 | KDI 홍보팀

주소 130-7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Tel 02-958-4030

Fax 02-960-0652

집필자 | 유경준 선임연구위원(02-958-4045)

KDI FOCUS는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

Korea's Leading Think Tank

[www.kdi.re.kr](http://www.kdi.re.kr)

##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유경준 | KDI 선임연구위원

“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초적인 정책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 평생교육훈련제도의 확립을 통해 인적자본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2)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여 고용률을 제고하며, 3) 빈곤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준된 조세와 공적이전 및 공공서비스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 I.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극화(polarization)란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양극화라는 개념은 1980년대 초반 유럽의 학자가 소득계층이 상류층과 빈곤층으로 이분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현상을 우려하여 이를 측정하는 지수를 고안하면서

학계에 소개되었다(유경준[2007a]). 즉, 양극화라는 용어는 소득계층이 양극의 두 계층으로 분화되고 두 계층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궁극적으로 성장의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OECD 가입국 중에서 중산층이 몰락되어 소득계층이 이분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나라는 없다. 다만,

*OECD 가입국 중에서 중산층이 몰락되어 소득계층이 이분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나라는 없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흔히 사용되는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지수로 측정되는 소득양극화 간에는 학문적인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외국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로 측정된 양지수의 변동 추이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유경준(2007a, 2007b)). 따라서 소득분포의 변동을 살펴보고 그를 기준으로 정책처방을 설계하는 데 있어 소득양극화는 소득불평등도와는 다른 별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

하지만 정치권과 세간에서 불평등 심화라는 용어 대신 양극화 심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표현이 명징하고 소득분배구조 악화를 우려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정착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양극화의 의미가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기에서는 이후 소득양극화라는 용어 대신 소득불평등을 사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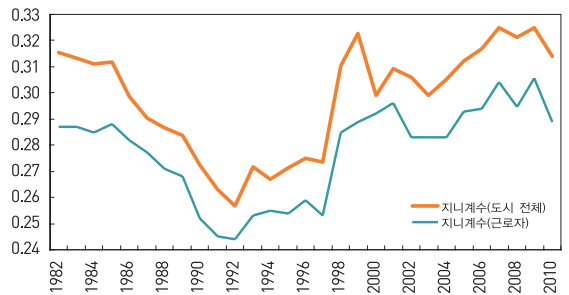
## II. 소득불평등의 현황

**우리나라는 불평등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는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선되었으며, 그 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전후로 급증한 후 최근에는 약간의 감소 후 정체상황이다.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은 1980년대 초반의 소득불평등 수준과 유사하다. 다만, 외환위기 전후로 급증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여겨진다.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다른 OECD 국가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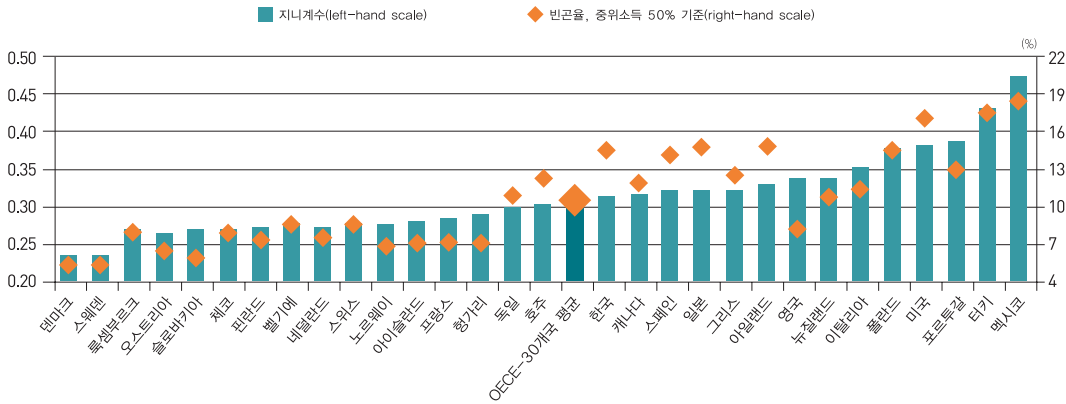
(그림 1) 도시가구(2인 이상) 지니계수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82~2002; 『가계조사』 원자료, 2003~2010에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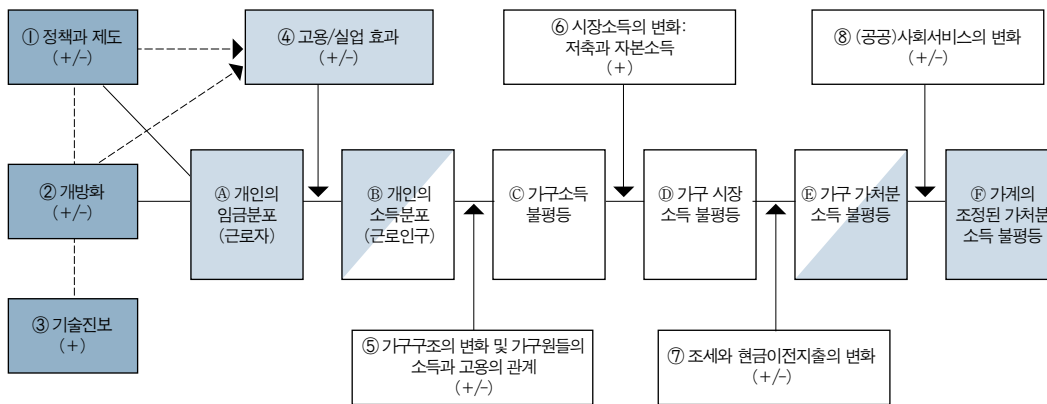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정확히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비율)이 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불평등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외국에 비하여 소득불평등보다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을 소득불평등도가 증가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1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의 소득점유율 증가는 주로 금융 관련 종사자들의 주식 배당 등의 성과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와 더불어, 외국의 경우처럼 고소득층에 소득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역시 찾기 힘든 상황이다.

(그림 2) OECD 국가들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수준(2000년대 중반)



주: 국가들은 소득불평등도인 지니계수의 증가순으로 나열되었음. 데이터는 가구 가처분소득(현금기준)의 분배를 나타내며, 가구소득은 가구 규모로 조정.  
 자료: OECD(2008).

(그림 3) 소득불평등 변화 분석의 틀(단계별 접근법)



자료: OECD(2011)에서 작성.

### Ⅲ.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

그러면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단일한 원인을 지목하기는 쉽지 않다. 대체로 ① 거시경제적 원인과 그에 따른 고용과 임금수준의 변화, ② 가구구조의 변화, ③ 정부의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 ④ 공공사회서비스에 의한 소득재분배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요인을 순서대로 짚어가며

외국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원인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 개방화, 그리고 해당 국가가 기술진보 및 개방화와 관련하여 선택한 제도와 정책이다. 이들은 개인의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쳐 소득불평등도를 변화시킨다. 또한 소득불평등도는 가구를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가구구성원 개인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이 따라 가구근로소득 불평등이 변화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소득

2009년과 2010년에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을 가져온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소득  
 가구의 2차 노동력(주로 기혼  
 여성과 자녀들)의 취업이 증가  
 하였기 때문

〈표 1〉 거시경제변수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영향

	임금격차에 대한 효과	고용률에 대한 효과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효과
<b>개방화와 기술</b>			
무 역	=	=	=
해외직접투자(FDI) 규제완화	=	=	=
기술진보	+ (**)	=	+
<b>정책과 규제</b>			
노동조합의 약화	+ (*)	+ (***)	= / -
상품시장 경쟁촉진(PMR)	+ (**)	+ (**)	+ / = / -
고용보호수준의 저하(EPL)	+ (***)	=	+
조세격차 약화	+ (***)	+ + (***)	= / -
실업급여의 삭감	+ (***)	+ (***)	+ / = /
<b>기 타</b>			
숙련수준의 향상(교육수준 증가)	- (***)	+ (***)	--

주: +는 양의 효과, -는 음의 효과, =은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냄. \*는 10%, \*\*는 5%, \*\*\*는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자료: OECD(2011).

불평등도의 개선을 가져온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소득가구의 2차 노동력(주로 기혼여성과 자녀들)의 취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최바울(2012)). 즉, 이들의 취업이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불평등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 증가가 저임금계층의 노동공급 증가를 야기하여 상당한 임금수준의 하락을 유발시킨다면 가구소득의 하락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숙련수준의 확대는 고용의 증가와 임금불평등의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유일한 정책수단**

기술진보는 대부분 숙련층에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으며, 개방화의 경우는 중국의 부상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임금을 하락시켜(김대일(2004))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비정규직 등의 고용보호수준 하락, 상품시장의 경쟁촉진, 실업급여와 사회보험 수준의 감소, 노동조합의 조직 약화, 교육과 훈련의 확대, 공정거래 및 하도급 질서의 약화 등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다. 이들의 변화는

대체로 교육과 훈련을 제외하고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sup>1)</sup> 더불어 임금수준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한편, 주의해야 할 점은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비정규직 고용보호수준의 완화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들은 대부분 고용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소득불평등의 증가만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숙련수준의 확대는 고용의 증가와 임금불평등의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유일한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하버드 대학의 클로디아 골드인(Claudia Goldin) 교수와 로렌스 캐츠(Lawrence F. Katz) 교수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기술진보에 대응한 교육과 훈련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Goldin and Katz(2008)).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나들었으나 대학교육이 직업이나 숙련의 향상과는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고

1) OECD 국가에서 고용보호수준의 약화가 고용을 증가시킨 명확한 증거는 없고, 경우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양상을 보인다(OECD(2011)).

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훈련제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번째로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구조의 변화도 다음의 경로로 소득불평등을 변화시킨다.

고령화에 따른 핵가족화는 노인빈곤을 증가시켜 소득불평등 심화를 초래한다. 또한 고소득자끼리 결혼하는 현상 assortive matching의 증가도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가구 중에서 거의 절반의 가구가 빈곤에 처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소득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조세와 이전지출의 확대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약 25% 정도의 소득불평등도가 재분배정책에 기인한 결과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7% 정도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되고 있고 이전지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정부의 소득재분배 수단은 현금지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 보건, 돌봄서비스 등 공공사회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공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효과는 OECD 국가의 경우 약 20%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공공사회서비스의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약 8%이고 OECD 평균은 13%이기 때문에(OECD[2011]) 향후 이 부분의 증가에 의한 소득불평등 완화의 여지가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이 1990년대 초반부터 확대된 주요한 원인으로 한국경제의 급속한 서비스화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외국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제조

업의 수출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고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의 구조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깨지고 부품의 수입을 통해 수출이 증가되었고, IT화 및 자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용의 증가를 동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되기 시작하였고 서비스업의 고용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에서는 세부 업종별로 규제와 진입장벽, 낮은 생산성, 과당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업 선진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서비스업이 향후 고용창출의 원천이고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 소득분배구조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유경준[2012]).

#### IV.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은 경제 및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많은 요인들이 소득불평등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다. 한 가지의 변화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변화를 동시에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단기적인 처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부른 처방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격차의 심화는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소득격차가 심한 국가일수록 계층 상승이동이 적게 나타나며, 빈부격차의 심화는 계층 상승이동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가구 중에서  
거의 절반의 가구가 빈곤에  
처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이  
1990년대 초반부터 확대된  
주요한 원인으로 한국경제의  
급속한 서비스화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외국과 구별되는 특징**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영국, 미국과 같은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세대 내 이동성이 적고,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균등한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이동성이 크게 나타난다(OECD(2011)). 또한 소득격차의 심화는 사회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사회갈등의 직접적인 원인과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회의 불평등의 결과는 결국 사회경제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포퓰리즘, 보호무역론, 반세계화 정서를 심화시키고, 이득을 보는 소수의 집단만이 더 부유해진다는 생각을 팽배 시키기도 한다.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초적인 정책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 평생교육훈련제도의 확립을 통해 인적자본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2)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여 고용률을 제고하며, 3) 빈곤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준된 조세와 공적이전 및 공공서비스를 통

한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공정,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방화나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하여 정부가 어떠한 정책(제도와 규제)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는 '슈퍼자본주의(supercapitalism)' 현상을 중산층의 약화와 소득양극화의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기업의 로비를 받아 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는 불공정한 사회를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해 소득불평등 완화대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

〈표 2〉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OECD 국가와 한국

소득불평등의 원인	경로와 외국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대책
① 개방화 (Globalization) (+/-) (산업구조 변화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과 FDI를 통해 (+) 또는 (-)</li> <li>•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남</li> </ul>	한국은 1990년대 이전에는 (-),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부상 및 수출과 고용의 관계 단절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화의 일부 피해집단에 대한 안전망 구축</li> </ul>
② 기술진보(Technical Change) (+) (산업구조 변화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편향적이기 때문에 (+)</li> <li>• 개방화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양자의 분리가 어려움</li> </ul>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었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와 직업훈련 참여 확대</li> </ul>
③ 정책과 제도(Policies and Institutio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개방화와 ② 기술진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짐.</li> <li>• 상품시장의 규제완화, 조세격차의 감소, 노동조합의 약화, 임금결정구조의 분권화(최저임금의 상대적 하락), 실업급여의 감소: 모두 고용 증가의 효과로 (-), 임금불평등 확대(+)</li> <li>• 고용보호수준 저하(고용 + or -, 임금불평등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도 대부분 마찬가지로 파악됨.</li> <li>• 최근 임금불평등이 다소 개선된 것은 고용효과가 임금격차 확대효과를 압도한 데 기인(-)</li> <li>• 2007년 비정규직법은 일정 기간 비정규직을 감소시켰으나, 이후 기업의 직무분리로 정규직 전환이 줄고 있음. 고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나 임금불평등 감소 후 다시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일자리 창출노력</li> <li>• 저임금계층에 대한 ETIC의 확대</li> <li>• 사회안전망, 특히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지속적인 해소(자영업자, 특수고용자 등)</li> <li>• 비정규직 차별 시정</li> </ul>
④ 고용과 실업의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완전 고용과 비경제활동인구를 고려(+/-)</li> <li>• ③의 변화에 따라 고용 증가에 따른 (+)효과와 임금소득불평등에 따른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가구의 부가노동 증가로 (-)</li> </ul>	상동
⑤ 시장소득의 변화: 저축과 자본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소득이 전체 소득의 7%이나 점차 비중이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li> <li>•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되었으나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로 영향 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본소득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li> <li>• 자영업자의 경우 그 비중이 점차 줄고 있으나 이들의 소득불평등 심화로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점검</li> <li>• 자영업자의 생산성 향상과 전직을 위한 훈련기회의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li> </ul>
⑥ 가구구조의 변화와 구성원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li> <li>• 고임금자끼리의 결혼 현상(assortive matching) 증가로(+)</li> <li>• 여성의 고용 증가는 소득불평등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도 마찬가지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 특히 단시간 근로에 대한 활성화와 보호대책 필요</li> </ul>
⑦ 조세와 이전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급여의 지불관행과 관대함이 변하여(+)</li> <li>• 근로조건부 급여의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로 시장소득 불평등도 확대(+)</li> <li>• 소득세를 낮추고 누진적인 체계로 이행하여 상쇄(=)</li> <li>• 고소득층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역할은 미진하나 오히려 역진적인 사회보장부담금의 구조는 재분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이전지출의 확대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li> <li>• 한국도 고소득의 소득점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제 준비는 아직 미흡(+)</li> <li>•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대</li> <li>•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 소득세 세제 정비를 통한 재분배정책 확립</li> <li>• ETIC 도입으로 (-) 가능성</li> </ul>
⑧ 정부 사회서비스 지출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보건, 돌봄, 주거, 육아 등에 대한 정부지출을 의미(평균 13%)</li> <li>• 전체 소득불평등의 1/5을 개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li> <li>• 2000년대 들어 별다른 변화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에서는 이 항목의 분배효과가 알려진 것이 없으나 비중은 낮은 편(8%)</li> <li>• 하지만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면 불평등은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의 확대 및 효율적 지출을 위한 한국의 상황 파악이 우선</li> </ul>

## 참고문헌

- 김대일, 『경제개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로버트 라이시, 『슈퍼 자본주의』, 형선호 역, 김영사, 2008.
- 유경준, 「소득분포 극화의 추정과 검증」, 『한국개발연구』, 2007 Ⅲ 별호, 한국개발연구원, 2007a.
- \_\_\_\_\_, 「소득불평등 개념과 실태」, 『노동경제논집』, 제30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7b.
- \_\_\_\_\_,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KDI 공청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2.
- 최바울, 「소득불평등 변화요인 및 소비지출의 노동수요 파생효과 분석-맞벌이가구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Goldin, Claudia and Lawrence F. Katz,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08.
- OEC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2011.